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0주차. 4·19 혁명
3강. 혁명 및 대안적 관점



학습 내용

1. 4·19혁명을 기존의 성격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이름 짓는다면?
2.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성격을 규정한다면?



학습 목표

1. 4·19의 진정한 성격과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2. 4·19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3강

혁명 및 대안적 관점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혁명의 대안적 개념에는 무엇이 있는가?
- 4·19 혁명이 아닌 다르게 이름 붙인다면?



1] 혁명

✓ 학자들에 따라 혁명의 정의가 서로 다름

✓ Kotowski의 논의 참고

- ➔ 혁명 개념을 일정 합의하는데 유용한 출발점 제공
- ➔ 혁명에 대한 주요 이론가들의 논의 고찰
- ➔ 그 혁명 이론의 속성 정리, 그 속성의 한 조합으로 구성
 - 폭력
 - 대중의 참여
 - 정부 교체
 - 소규모/대규모의 정치구조 변화
 - 계층 체계 변화



1] 혁명

◆ 폭력

☑ 폭력은 일반적으로 사회·정치혁명의 기본 속성

- ➡ Gurr, J. Davies 등은 혁명을 대중적 폭력을 동반한 (모든) 사회정치적 현상 정의함
- ➡ 이 경우, 혁명과 다른 대중폭력의 사건들, 이를테면 반란, 봉기, 폭력 시위, 폭동 등을 구별할 수 없음
- ➡ 따라서 혁명에는 그에 수반되는 일정한 변화, 혹은 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함
- ➡ 이는 대개 정치혁명, 사회혁명의 경우 의미



1] 혁명

◆ 폭력

☑ 다른 분야에서도 혁명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

- ➡ 이를테면, 산업혁명, 정보혁명, 의식혁명 등
- ➡ 이 경우 폭력 사용 여부, 또는 대중의 집단행동 여부와는 무관

☑ 사회정치 혁명에서 폭력은 혁명의 필요 수단/도구

- ➡ 이런 의미에서 폭력은 혁명의 본질적 속성(또는 내용)은 아님
- ➡ 혁명의 본질은 ‘어떤 성질의 근본적 변화’라고 할 수 있음



1] 혁명

◆ 대중의 참여

1 혁명의 필요조건

2 관료/정치엘리트에 의한 ‘위로부터의 혁명’도 상정할 수 있음

3 따라서 대중의 참여가 혁명의 정의적(定義的) 속성이 아닐 수 있음



1] 혁명

◆ 정부 교체

이를 혁명으로 정의하면, 쿠데타, 궁정반역 등도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음

때문에, 혁명은 기존 정부의 교체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



1] 혁명

◆ 소규모/대규모의 정치구조 변화

☑ 최대 논쟁 가운데 하나

- ➡ 소규모/대규모의 경계선 모호
- ➡ S. Huntington과 C. Johnson은 혁명의 구성요건으로 사회 · 정치구조의 심대한 변화 주장
- ➡ 혁명을 소규모의 정치구조 변화에 국한시킨 Kotowski의 견해는 오류
- ➡ 소규모의 정치구조 변화는 제외



1] 혁명

◆ 소규모/대규모의 정치구조 변화

☑ 사회·정치혁명은 특정 사회·정치체제의 급속한, 대규모, 구조적 혹은 근본적 변화

- ➡ 이런 정의로 혁명과 반란, 쿠데타, 봉기, 항쟁, 폭동 등의 용어 구별 가능
- ➡ 혁명에 대한 일반 통념과도 부합
- ➡ 이런 정의에서 산업혁명, 기술혁명 등도 사회혁명, 정치혁명 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



1] 혁명

◆ 소규모/대규모의 정치구조 변화

✓ T. Skocpol의 정의



- ➔ 분석의 필요상 사회혁명과 정치혁명 구분
- ➔ 사회혁명은 민간사회 구조, 특히 계급구조의 대규모 급격한 변화
- ➔ 정치혁명은 국가 구조의 급격한 대규모 변화

✓ T. Skocpol의 정치혁명은;

- ➔ 혁명 이전의 정치/사회적 지배집단 축출
- ➔ 다른 성격의 정치/사회적 집단이 정치권력 또는 사회적 지배권 장악
- ➔ 정부와 정치체제 변화만으로는 정치혁명으로 정의할 수 없음



1] 혁명

◆ 소규모/대규모의 정치구조 변화

☑ 정치혁명으로서의 4·19

- ➡ 도전세력의 구체적 의도와 도전의 결과가 정치혁명의 요건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해야 함
- ➡ 혁명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들에 대한 엄밀한 개념 규정을 하지 못했음
- ➡ 일반적 통념을 따른 성격 규정(예: 4·19혁명론/4·19학생의거)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비판론자들의 문제의식

- ✓ 4·19와 정권 변환을 ‘혁명’이라고 이름 짓기에는 한계가 있음
- ✓ 그 원인과 결과와 관련하여, 기존의 혁명론에선 사회·경제적 측면 중시
- ✓ 이보다는 사회·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
- ✓ 그럼에도 이들 역시 혁명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의 혁명성 주장(박광주)

☑ 4·19는 민중이 주도한 폭력에 의한 권력교체였기 때문에, 혁명이었음

☑ 혁명의 핵심 구성요소는 민중, 폭력, 권력교체임

☑ 4·19는 이 요소를 두루 구비함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일반적인 반론

- ☑ 민중 주도가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
- ☑ 혁명에는 엘리트가 주도하는 ‘위로부터의 혁명’도 존재하므로 혁명의 정의가 모호함
- ☑ 물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진정한 혁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음
- ☑ 그럼에도 혁명의 본질은 주도/주체세력보다는 ‘변화의 폭과 성격’에 있을 수 있음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일반적인 반론

- ✓ 혁명이 대개 폭력을 수반하지만, 혁명의 본질은 아님
- ✓ 본질은 '구조의 근본적 변화'
- ✓ 근본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대규모의 민중 참여, 기존 지배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폭력이 수반되는 것임
- ✓ 혁명의 본질은 민중, 폭력, 체계적인 조직, 지도자, 이념 등이라기 보다는 근본적 변화임
- ✓ 근본적 변화에 민중, 폭력, 조직, 지도자, 이념이 필요한 것임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☒ 폭력 행사

- ➔ 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'민중' 주도
- 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 시위
- ➔ 폭력 행사는 정부 세력
- ➔ 폭력 수반되었기 때문에, 그것이 혁명이었다는 말은 사실과 어긋남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권력 교체

- ➡ 대중의 시위, 대통령 하야, 권력교체 등으로만 혁명이라고 할 수 없음
- ➡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함
- ➡ 4·19혁명론자(예: 박광주)는 이승만 독재체제 붕괴, 민주당 민주정부 출범을 혁명으로 정의
- ➡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혁명으로 규정
- ➡ 이승만 정부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, 이를 실행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
- ➡ 권력 남용자 축출, 권력구조를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뀜
- ➡ 다시 말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한 것
- ➡ 체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, 즉 온전한 의미에서의 혁명으로 간주하기는 무리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4·19 주도세력(학생)의 행동목표

- ➡ 처음에는 ‘학원 자유’, ‘부패와 독재의 배격’
- ➡ 3·15 부정선거와 마산사태를 계기로 ‘부정 선거 규탄’ ‘정권 퇴진’ 등의 더 정치적 목표
- ➡ 전 과정의 목표는 학원 자유화, 부정선거 규탄, 부패 · 독재 규탄, 정부 책임자 처벌 또는 사퇴
- ➡ 이승만 하야 전의 목표는 기존 정권의 모순에 대한 반대 표명
- ➡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거나 주장하지 않음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해야 이후의 행동목표

➡ 장면 정권 하의 학생들, 특히 민족주의적인 자주화·통일운동의 목표

1 온건적·낭만적·비정치적

- 구체적인 통일방안 제시보다는 남북한 학생회담 및 통일기원 축제 요구
- 이데올로기 초월, 민족적 주체세력 총집결, 적당한 시기의 서신 왕래, 인사 교류 및 기술 협정 등의 단계적인 남북교류 주장
- 통일을 기피하고 민족분열을 연장하는 보수 세력 비판
- 무모한 통일론으로 사회혼란을 자초하는 혁신세력 비판
- 북한 공산당의 간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
- 이는 한국사회·정치의 혁명적 변화 요구와는 관계가 적음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해야 이후의 행동목표

➡ 장면 정권 하의 학생들, 특히 민족주의적인 자주화·통일운동의 목표

2

반외세 자주화 주장

- 모호하고 온건한 구호
- 당시 체결된 <한미행정협정> 반대
-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자주 및 독립 강조, 한미 간의 평등과 대등한 관계 주장
- 혁명적인 주장으로는 반봉건, 반외압 세력, 반매판 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민주혁명(서울대학교의 '4월 혁명 제2선언문')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해야 이후의 행동목표

➡ 장면 정권 하의 학생들, 특히 민족주의적인 자주화·통일운동의 목표

2

반외세 자주화 주장

- 그 역시 민족주의적, 민주주의적 염원을 반영한 추상적 구호
- 학생들도 인정했듯 이론적·조직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, 구체적 행동으로 전개되지 못했음



2] 4·19 혁명론 및 그 비판

◆ 4·19혁명 비판

☑ 4·19혁명론의 비판

- ➡ 주도세력은 이승만 하야 전후에 체제전복과 신체제 건설을 위한 사회/정치혁명을 시도하지 않았음
- ➡ 이를 뒷받침할 이념적 토대도, 조직적 기반도 없었음
- ➡ 보수적이고 무능하다고 간주한 민주당 정부 퇴진요구도 없었음
- ➡ 4·19의 혁명성은, 이승만 정권의 전복 혹은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이해



3] 대안적 성격 규정

☑ 기존의 민중혁명, 대리혁명, 시민혁명과는 다른 대안적 성격 규정

1

해방 이후 수입된 자유민주주의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현실간의 괴리에서 발생

- 체제 도전은 학생 주도
- 주변계층과 기타 일반 시민들 가담
- 사회세력의 미분화, 저발전
- 일반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
-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주도세력으로 나섬
-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와 정치적 독재, 사회적 부패에 민감
- 도덕적 사명감과 행동력 보유
- 사회경제적 낙후와, 이에 따른 학생 및 시민의 불만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짐



3] 대안적 성격 규정

☑ 기존의 민중혁명, 대리혁명, 시민혁명과는 다른 대안적 성격 규정

2

돌발적·즉흥적·자연발생적

- 사전에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님
- 저항의 자연발생성은 국가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함
- 사태가 진전되어 갈수록 그 규모와 목표가 증폭되어 가는 양상을 띠게 만들었음
- 4·19의 결과도 주도세력의 사전 준비와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,
- 사회세력과 국가 간의 도전/대응의 과정을 통해 처음의 의도, 혹은 예상과는 관계없는 경로로 진행됨



3] 대안적 성격 규정

☑ 기존의 민중혁명, 대리혁명, 시민혁명과는 다른 대안적 성격 규정

2

돌발적·즉흥적·자연발생적

- 저항의 자연발생성과 즉흥성은 봉기의 이데올로기, 프로그램, '유토피아'의 부재 의미
- 성공 이후, 혁명으로 진전되지 못한 이유
 - 학생도, 시민도, 민주당도 무엇을 부술 것인지는 알았으나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몰랐음
- 대안적 의미에서, 4·19는,
 - : 자유민주주의를 '향한' 저항
 - : 독재와 부패에 '반대한' 저항



학습 정리

- ? 4·19는 자유민주주의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현실간의 괴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- ? 돌발적·즉흥적·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- ? 대안적 의미에서, 4·19는 자유민주주의를 ‘향한’ 저항, 독재와 부패에 ‘반대한’ 저항으로 성격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.





참고문헌 및 읽을 거리

- 김영명. 2017. “4·19의 성격.” 「한국정치외교사논총」 39(1): 75-111.
- 권보드래. 2010. “4·19와 5·16, 자유와 빵의 토포스.” 「상허학보」 30: 85-134.

